

투데이

징수기간 30년 지나 통행료 부과대상 제외됐는데...

호남고속도로 5522억원 더 걸었다

문병호 의원, 도로공사 전국서 3년간 3조원 징수

한국도로공사가 법을 어겨가며 지난 3년 동안 3조원 이상의 과도한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징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3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에게서 총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도로공사가 어긴 법은 유료도로법,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보상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은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 중 현행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는 '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들 노선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조 2930억원의 통행료를 더 거뒀었다.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호남선(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

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호남선에서 5522억원, 호남선 지선에서 1297억원 등 4개 도로에서 모두 8544억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더 부과시켰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가 같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날 통행료 징수기

간을 30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하도록 명문화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공사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의를 거쳐 30년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선·남해2지선·경인선의 통행료 부과는 없어진다.

하지만, 호남선과 지선의 경우 건설유지비총액의 회수율이 58.6%, 55.7%에 불과해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녹조 현장 찾은 유영숙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광주 남구 승천보를 방문해 녹조 발생 상황을 살펴본 뒤 이재현 전남강유역환경청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남해안 올 첫 적조경보...수온 높아 확산 우려

남해안에 올해 처음으로 적조경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8일 경남 남해도 남면 중단에서 서면 중단 해역에 올해 첫 적조경보를 발령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첫 적조주의보를 내린 뒤 3차례에 걸쳐 적조주의보를 확대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경남 남해도 서측연안(장정~염해)에서 유해적조생물인 코클로리디니움 ml 당 최고 밀도 1만1000마리까지 나타났다.

적조경보는 바닷물 ml 당 유해적조생물인 코클로리디니움 1000마리 이상 검출되면 발령된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늘어나 바닷물 온도가 25~27도의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고 바닷물 염분농도도 높아 바다환경이 코클로리디니움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어서 적조경보 해역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5만그루 나무심기·바람길 조성

'시원한 광주 만들기 10대 시책'

광주시는 최근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열대야 현상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시원한 도시 광주(Cool City Gwangju) 만들기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기존상상에 따른 도심 열섬 현상을 없애기 위해 ▲ 2015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적극 추진 ▲ 물 순환 체계 확대 ▲ 바람길 조성 등 4대 분야 10대 시책을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전면적 방안을 허용하는 시범학교 20개교를 선정해 학교 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지 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폐기장 정비를 통한 공원녹지 확충과 함께 보호수 주변 소공원화 사업 등을 진

행할 계획이다. 또한, 옥상에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율이 큰 재료를 사용,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열을 감소시키는 쿨루프(Cool Roop) 설치시 건물 소유자에게 비용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원 24개소에 탄소 숲 효과가 큰 나뭇잎을 식재해 환대하고, 수경시설을 도입해 열섬 현상을 줄일 예정이다. 이밖에 ▲ 옥상정원 및 벽면녹화 확산 ▲ 복사열 차단과 불투수층 면적 축소 ▲ 빗물 저류조 설치 등으로 물 이용 시스템 확대 ▲ 바람길 조성 ▲ 담장 허물어 공원화사업 확대추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김주열 사장 연임



전남개발공사 제4대 사장에 현 김주열(58) 사장이 연임됐다.

전남도는 8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월 전국공

모를 통해 지원자 6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 김 사장을 추천해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사장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강진에서 출생해 1974년 광주시 토목직공무원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1980년 한국도지공 사로 자리를 옮겨 수많은 택지·산단 조성사업을 이끌었다. 이후 사업개발 처장, 택지사업1처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뒤 제3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오광복기자 kroh@

홀로사는 노인가구 근로장려금 제공 비과세 '재형저축'도 18년 만에 부활

올 세법개정안 확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폐지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올리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제공한다.

관련기사 9면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일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부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

는 30%를 유지했다. '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제한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불입한도는 월 100만 원폭이다.

가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장기저축은 재형저축과 같으며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올라간다.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조정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액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져 내년부터 최대 연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금(EITC)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최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의 비과세 요건은 간간해진다. 목돈을 맡겼다가 연

금으로 받는 즉시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2만1120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들의 반발과 '부자감세' 논란 등으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연금소득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소득 과세는 정상화한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늘리고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9.8% 귀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금가입으로 통일재원 기여...통일예금 출시

예금 가입으로 통일재원 적립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된다.

통일부와 농협중앙회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통일 준비와 관련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통일재원 모금을 진행 중인 민간단체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자)'도 업무협약에 동참했다.

농협은 매년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통일향არი 예금' 편성의 0.1%를 통일재원으로 기부하게 된다. 예금자도

예금 가입을 통해 통일재원 적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셈이다.

농협은 현재 '통일향არი 예금' 상품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5600여개의 전국적인 농협 지점망을 통한 통일준비 홍보도 이뤄진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angeul and Hanja instructor qualifications, including details on course date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University and Gyeongsang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ant recruitment (공무원 대출) with details on interest rates (연5.5%~연8.0%), fe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Advertisement for Namseong's '성기능강화제' (Sex Function Enhancement Supplement),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vitality and health.

Advertisement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offering Korean language courses and exam preparation for various levels.